**권력구조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재조포럼 개헌토론회**

일시 2018년 6월 20일(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국회 국가재조포럼(공동대표 김두관, 박성중, 윤영일 국회의원)

좌장: 최태욱 교수

발제자: 장영수

토론자: 박원호, 지성우, 하승수

개헌의 관심이 뜨겁다. 핵심적 이슈. 권력구조 개편. 대통령 과도한 권력집중.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야 합의 어느정도. 개헌논의 잊혀진 감이 있다. 토론회를 마중물로 국회에서 권력구조개편 진지한 논의. 토론회 말미, 질의응답 예정.

박성중 자한당: 국가재조포럼. 임진왜란 끝났을 때 조선이 인구가 500만이었는데 끝나고 150만 정도 되었다. 나라가 박살났을때 국가를 다시 일으키는 운을 제공했다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데, 국가재조해야 할 시기. 그래서 재조포럼을 만들었다. 30년 전 대통령제도. 4개국 정도만 대통령제 하고있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필요. 삼권분립이야기 하지만 대통령은 행정부를 잡고 있다. 입법부는 여야로 갈려있다. 권력은 나눌수록 낫다. 우리도 검토할 때가 되었다. 미국식 대통령제. 예산권도 국회에 있다. 감사도 국회에 있다. 모든게 정부에 있다. 새로운 시대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집중 검토필요하다. 재설계 도움될듯.

윤영일 민평당: 적극적인 당이 민평당 아닐까 생각한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겅험하고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 권력분산형으로 개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시대적 소명이어서 이 자리가 의미있다. 감사원 출신이고 공기업 임원 출신인데 논쟁거리가 많은데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당리당략 차원으로 이야기를 해서 화를 낸 적인 있다. 개헌안에는 독립기관화되어 잇다. 당리당략이 아니고 국민들의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고 대한민국 위치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다.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여야 넘나들며 논의하고 있다.

2부

최태욱 좌장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활발했었다. 개헌특위 1년 이상 논의되었고, 자문특위 만들어서 권력구조개편안과 선거제도 비례성을 높이자는 의견은 공토오디었고, 권력구조개편은 다양했었다. 4년 연임 민주당, 분권형 대통령 이원정부제 개편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다른당. 비례대표제 강화냐 아니냐 부딪힘. 상당기간 활발하다가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자한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동의하면 청와대 민주당도 권력구조 개편 생각해볼 수 있다. 빅딜의 가능성 이야기 했었는데 물건너갔다. 정부여당이 국회 협력 얻지 못하고 국민투표 회부 못하고. 지방선거 치렀다. 입 모임이 지방선거후 첫번째 개헌 논의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활발하게 진해오딜 거 같다. 아주 중요한 자리다. 발제자와 토론자는 정치개혁 앞장서신분. 따로 설명하지 않겠다.

장영수 발제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에게 개헌은 무엇인가? 국민은 개헌을 실감하지 못함. 헌법 국가질서의 틀 바뀌었을 때 어느정도 변화가 있을까? 잘못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실감하지 못해서 국민의 관심이나 적극적 의견표명 적다. 국회자문특위 위원으로 일하면서 국민참여개헌 이야기했지만 참여 별로 없었다. 개헌의 중요성은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다.

개헌은 나라의 기본틀. 우리가 어떤 대통령, 어떤 국회르 ㄹ갖고자 하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나 사회, 국가 전반의 변혁의 기초, 통일을 위해서도 어떤 시스템을 가질 것인지 기초가 마련되어야 함. 현행 개헌은 수명을 30년 넘은최장. 과거 평균수명 5년 채 안됨.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나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다. 문제될 수 있다. 헌법학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 한 것이 10년이 넘었다. 권력구조 이견이 여야 합의 보지 못함. 개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헌법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 인권이 핵심인데 왜 권력구조 이야기냐. 권력이 오남용되니까 국정 왜곡 혼란이 국민인권침해될 수밖에 없더라. 인권 따로 권력구조 따로가 아니다. 현행헌법 나름 잘 기능해옴. 성공적인 헌법이라고 하지만 그 한계를 보여준게 최순실사태. 박근혜 전대통령 파면, 탄핵.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권력 오남용하면 타핵하면 되지 않느냐? 무책임하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 탄핵요건은 국회의원 2/3 요건이 되어야 소추(안) 가능. 이런일 되풀이 해야하느냐.

지나친 낙관 안됨. 사람이 문제지 제도가 문제냐? 사람도 제도도 문제다. 제도의 취지는 그러한 사람의 문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제 승자독식의 문제를 지적한다. 의회 내에서 다수당이 되더라도 국회의 과반의석을 차지해도 대통령을 선출한 정당이 여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면 정권을 가져간 정당이 국정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승자독식이다. 지금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입법권이 있지만 통제만 하는 기능이 있다. 국회는. 협상과 협지 이야기한다. 주고받는게 있을 때 협사잉 된다. 이런 구조하에서 야당이 할수 있는것은. 다음 정권을 가져오는 것 밖에 없음. 미국의 대통령제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곤란함. 우리만큼의 승자독식 아니다. 우리국회는 미국 의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미국 트럼프가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 공화당까지 나서서 구고히에서 막는다. 우리나라는 여당이 대통령이 되어서 하지 말라고 하기 어렵다. 2008년~9년까지 당시 국민들 국회불신 높았다. 1년여동안 연구검토. 의원내각제 국민이 수용못하니까 힘들다. 이원정부, 분권형 가보자 시도했었다. 19대 국회에서 헌법개정 자문위 결론 같았다. 20대 국회 헌법개정특위도 같은 결론. 국민여론을 몰라서가 아니라 혁신적 변화없이는 달라지기 힘들다. 분권은 정부여당도 반대하지 않음. 개헌의 핵심은 분권과 협치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분권과 협치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자문위 안이나 야당들은 대통령제를 유지보다는 바꾸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 최소한 두가지 전제조건 첫째 미국처럼 정치문화 달라지고, 여당이 대통령 추조잉 아니라 통제할 수 있어야. 미국의 대통령제. 연방.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함. 미국식 대통령제로 하는건 당장의 실현가능성은 별로 없다. 대통령 개헌안은 형식상 분권형 같지만. 실질적으로 아니다. 총리 임명 해임권이 여전히 대통령에게. 감사원 독립한다면서 여전히 인사원 대통령에게 있다. 차라리 혼란 있을지 모르지만 분권형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 장기적으로 봐야할 할것은 통일이다. 토일헌법은 어떻게 가져가야 좋으냐. 둘이 하나로 합쳤다라고 끝나는게 아니다.

* 의원내각제가 통일에 어떻게 유리하다는 말인지 이해 안됨
* 미국식 대통령제는 성공적이라고 보는가?
* 국민 설득 과정 통해 결론내려야 한다.

최태욱 좌장: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좋아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쓰는게 곤란해하고 있다. 못된 제왕의 출현을 맞기 위해서. 훌륭한 제왕이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다. 승자독식 지적해주고 분권이 필요한 이유. 권력을 나누는 것은 협치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대통령제에서도 분권 가능한가에 있어서 한국형은 어렵다. 통일 대비하여 의원내각제가 필요하다.

박원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의회를 공부하는 사람이다. 의회가 더 많은 역할을 했으면 한다. 장기적으로 내각제 맞다고 본다. 장교수와 입장 다르다. 현실성에 대한 것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제 제도자체가 나쁘지 않다.

첫째, 분권이라고 하는게 합의된 가치인것 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분권이 중요하지만, 다른 반대편에 리더쉽, 불과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다한당 전신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취했던 입장은 정부의 연속성에서 4년 중임제였다. 입장 변화가 나쁜게 아니라. 둘 다 유효하다. 어느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분권 위해 권력을 쪼개자는 전제는 토론이 어렵다. 실제로 동의하지 않는다. 여론조사 하면 개헌과 관련한 입장ㅇ이 당파적이다. 민주당 지지자는 대통령제 지지 높고. 자한당 대구경북지역은 분권형 대통령제 지지가 높다. 당파적이 되면 안된다. 한국에서 한때도 내각제가 인기가 있었던 적 없었다. 가장 인기 있을 때 2016년 탄핵촛불국면에서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진짜 헌법에서 기인한 것이 맞냐? 헌법 이외에도 많다. 사람. 제도 다 포함됨. 한국의 제왕성이 헌법만 아니라 인사권 검사들 임명, 공기업, 서울대도 총장선출도 청와대를 거쳐야함. 대학총장이랑 대통령이랑 상관없는데. 지난이번 정권도 손에 잡히는 제도, 관행같은 것에 대통령의 제왕성이 들어있다. 헌법 뿐 아니라 다른 곳에 숨어있다.

분권형 대통령제 내치외치 구분안하면 어떻게? 헌법 코드 들어가야. 어떻게 대통령과 수사잉 나눠야 하나? 내각제를 이야기하면 의회가 내가그이 수상 선출해서 행정업무 보냄. 의회에서 불신임 하면 해임할 수 있다. 내각 자체를 해임할 수 있다. 역방향의 책임 의회를 해산시키고 재선거를 하는 책임성. 의회가 총리 뽑아서 보내면 제왕적 총리라면? 어떻게 할지는 논의가 없다. 어떻게 국회를 해산할 건지도 논의 없이 내각제 막하는 것은 논의에 도움 안된다. 장영수 교수에게 질문이다.

국회의 신뢰 때문에. 내각제 장점 모르고, 분권형 잘 몰라서 계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내각제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 분명하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잘되지 않을거라는 확신이 있다. 분권형 대통령 개헌이 지금이 정말 적기인가? 지금이 더더군다나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 정당의 지지율과 국회의석 배분 자체가 다른데 의회가 개헌을 통해서 정권에 더 큰 지분을 차지하는 개헌논의는 적절치 않다. 역풍이 불수도 더 큰 제왕적 대통령제로… 정치학자로서 정치학자를 위한 광고같은건데 계속논의해오셨는데 저희도 비교정치하는 사람들 끼워졌으면 좋겠다. 남미 의회제 실질적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제반 사회과학도. 헌법학자 법률가도 사회과학도 토론했음 좋겠다.

최태욱 좌장: 분권이 최상의 가치인가에 동의하는가? 문화관행의 문제일 수 있다. 분권형 책임성 보장 쉽지 않음.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국회 의회중심제 가면 지금처럼 신뢰도 낮을 때 어렵다. 정당 여러분이 선거제도 개혁해서 민의기관으로 가겠다면 문대통령이 분권형도 옺ㅎ다고 했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첫째, 장교수 말씀 중에서 개헌이 필요하냐? 정당성과 현실성의 차이라고 본다. 응답하라 1987 힛트 했는데 현행 9차 헌법 87년에 만들어졌다. 30년의 간극이 있어서 헌법현실이 발전했다. 사회변화는 빠른데 헌법은 30년동안 변하지 않음. 변화하는 현실에 따라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정당성에는 동의하는 것 같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국민이 현행헌법을 이원집정부제, 분권의 경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개헌을 하기에는 때가 되었으나, 언제가 개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둘째, 개헌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까?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학회에서 쓰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림 정부와 여당이 집권당이고 집권당이 다수를 차지해서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법안을 통과실 수 있으면 제왕적이 맞지만, 여소야대가 되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건 인사권, 국민이 원하는것 고치는 거 이외엔느 법을 전혀 고칠 수 없다. 따라서 제왕적대통령제라고 할 때는 틀린 절반이 우리나라에서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이번에 모 당이 한 쪽당은 압도적으로 이기고 압도적으로 졌다. 2006년 완전 만대였다. 10년만에 바뀌었다. 집권 4년차의 법칙, 5년 단임제에서 4년차 쯤 되면 검찰언론하계 등 대통령 대척점에 서는 쪽으로 움직인다. 대통령 잘못은 상관없이 의견의 반대방향, 차기 대통령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선다.

헌법을 개정해서 5년 단임을 4년 연임으로 바뀌어야. 두번짼느 국가권력분립은 중앙정부 분립은 압니다. 시민단체도 분립요소다. 재정자립도 30~40%도 안되는 상황 지방자치. 지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세금 양도해야 함. 중아정부기관간의 권력분립, 지방과 정부의권력분립도 필요함. 국민이 지방권력으로 넘기는 문제에 있어서도 호의적이지 않다. 국회를 믿지 못하는 만큼 지방정부도 못믿고 있는거 아니냐.

셋째, 한국정치 문화 개편 핵심은. 큰 헌법적인 말씀 드리면 1사람이 투표하면 가치가 마지막에 뽑히는 선출되는 권력과 등가되어야 함. 50%가 뽑으면 50% 의회권련 뽑히는게 당연하다. 더불어민주당 50% 조금 넘었느네 지방권력 90%를 차지해버렸다. 예전 한나라당, 새누리당때도 압승할 때 80% 차지함. 이번 20대 총선도 민주당 새누리당 60% 득표로 의회권력은 80% 넘는다. 정의당 8% 정도 지방권력 2~3% 안됨. 양자 승자 독식구조될수밖에.

우리나라 헌법개정 하나만 하라고 하면 소선구제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도 전환해야 한다. 중대형 선거구제도 개편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야동도 전향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다.

21대 총선까지 이어진다면 의회권력가지 불비례한 권력구조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질문) 지방과 중앙에 대해서는 발제문에서 말하지 않음. 예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최태욱 좌장:

핵심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613 지방선거 민주당 득표율 지방권력90%까지. 호남은 민주당이 영남에서 자유한국당이 권력을 가져갔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분권과 협치 방향 동의한다. 분권과 협치 큰틀로 가기 위해서 선거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분권형 이원정부제는 핀란드다. 핀란드가 성공적으로 운영된 비결 1918년부터 비례대표제로 선거해왔다. 국회가 다당제가 되고. 다당제에서 총리나 내각을 구성할때 한 정당이 독주못하기 때문에 협치 이뤄짐.

대통령을 직접 뽑고, 국회구성 내각이 일정한 역할을 하는 구조.

그 대통령도 호낮 못함. 연립정부 다수파와 협력해야 한다. 핀란드 모델을 봤을 때 분권형 성공형으로 운영될려면 비례성 보장되는 선거제도 필요.

오스트리아 분류에 대해서 의견 분분하나. 직선대통령 국회선출 내각 협치해왔다. 비례대표제.

우리나라 선거제도, 권력구조가 바꾼다고 해서 분권형 안된다. 지방선거 결과 보면 비례성 완정 깨졌다. 수도권 50% 득표율 90% 시도의회 의석 차지함. 부산울산경남은 2014년 새누리당이 50% 득표해서 90% 차지 이번에는 부산울산경남 정반대 현상이었다. 부울경 모두 민주당됨. 의회와 시장 같은 정당 분권과 협치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도 권력구조 바꿔도 분권협치 불가능.

지역주의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드러나지 않은건 지역주의. 극단적인 불비례성,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나타남. 대체로 선거제도 덕을 받았었는데 이번선거는 자한당이 손해를 많이 봄. 외국의 예를 보면. 선거제도 개혁이 쉽다. 100년 도입되었는데 선거제도 타협의 산물. 양쪽이 공존하는 방법. 한쪽이 독식하면 공존 불가능. 선거제도 개혁을 정치세력간의 타협 필요.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불가능.

일본선거결과 보여줌. 아베총리 제왕적임. 의원내각제지만. 아베총리쪽 2/3 의석 차지함. 아베 견제 불가능. 아베총리쪽이 정당 지지는 작년 총선 47% 받았다. 그 득표율로 의석 67% 차지해버리니가 제왕적 총리 탄생. 분권과 협치 쪽으로 가려면 선거제도 가야 함. 의원내각제가 분권과 협치라는 기대효과를 얻지 못함. 연동형 비례대표제..야당에서 합의를 해줘버리면 대통령도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했던 말이다. 권력구조 개편논의 하려면 선거제도 먼저 합의해주는게 명분을 얻는 것이다. 권력조 관련

하나 대통령 유지 권한분산하는 것. 이번 개헌안 미진. 인사권을 획기적으로 포기해야 함. 비판받을 지점이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사법기관 안됨.

하나 총리 국회선출. 분권. 또다른 절충이 필요하다.

하나 총리추천제. 구고히에서 총리 추천하면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절충한다면 선거를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가고, 총리추천제 타협점 찾아서 정치세력간 대타협 필요하다.

외국에서도 타협해서 한다. 헌법게정이던, 선거제도 개혁이던, 큰 틀의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제도의 부작용을 보완해야 함. 대년 선거법 개정안과 개헌안 통과해야. 총선 다가올수록 정치개혁 힘들어지낟. 그 전에 선걱법 개혁 개헌이 대한민국 국민, 한국정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룰이 바귀면. 그 룰에서 정당들이 경쟁하면 된다. 선거결과가 공정하다. 득표와 결과가 정당하다. 자한당이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다. 지난 번 자한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받고 권력구조개편 타협 필요.

여당은 배가 부른 상태라. 대통령 지지율 언제가지 유지할지 모른다. 민주당 당론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분권협치였다. 하지만 지금 안한다면 부메랑을 받을 것이다. 약속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올래 정기 국회때 타협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최태욱 좌장

비례성이 보장된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

과대대표, 과소대표되는 상태에서 분권이 이뤄질 리가 없다. 자한당 변수 강조한게 눈에 띤다. 지방선거 이전 자한당은 선거제도 고칠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방선거 치르고 나서 어려운 당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변화가 있을 것인가 지켜볼 만 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총리추천제 정도의 분권형 내년쯤 동시통과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

지성우: 비례성을 높이자는 건데. 투표가치의 비례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독일식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될수도 있겠다고 생각한건. 총선때는 보수당에 있던 노령층이 도시안쪽으로 흡수되는 문제가 생김. 보수야당이 불리한 경우가 계속발생하겠다. 이대로 20년가면… 지금쯤 이 이야기를 할수 있겠다. 어려울 수 있다. 어려운 것음. 민주당 3개, 국민의당 1개. 민주당 권역별 , 국민의당 정체적으로 하자고 함. 3개 여야 주요정당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45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생기는걸 용인하겠냐. 국회의원정수에서 한명이라도 넘는 걸 용인하지 않음. 연동형비례대표제 이야기할때 국회의원 정수 늘어나고 국회에서도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이야기해야 함.

전병구 서초: 행정부에서 위원회 구조를 할 수 있는게 법제화된 게 있느냐. 구성위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예산 지원. 검창철 지청같은 경우, 시민위원회를 근무시간에 해서 지청장이 위원회를 소집한다. 어떤 인물인지 정보공개청구 하니까. 개인정보상 안됨. 행정부에서 자기맘대로 함. 지방자치선거에서 깨진 것이 공작정치 민주당들이 함.

고주위 서초: 이번 지방선거 이후. 거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북한과의 문제도. 헌법부분이 빠졌다. 헌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비례제 받아주면 인정해주겠다. 헌법을 대통령이 만드는 겁니까? 대통령 탈당하면 국회를 쥐락펴락 못하고 있다. 서로 의지할려고 결정 목하고 있다. 지성우 동의하나 국회의원 예산 깎으면 됨. 국회의원 늘어나면 문제 안됨. 탄핵과 흐름에 있어서 바미당 득표수 지켜보라. 더하면 이긴셈

서정옥 성마: 장교수 승자독식 내각책임제 좋다고 했는데. 승자독식은 국회가 더 큰 문제가. 국회가 내각을 만든느 거잖아요? 국민의 삶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 궁금하다.

양평 강: 분권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 권한은 분권이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제왕적 총리 가능성 높다. 어떻게 견제가 된다는 건가? 대통령제 여대야소면 무조건적 협력 될수도 있다. 국회의원은 특정지역은 저 사람을 좋아서 찍은게 아니라 정당이 공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찍는 경우가 많다. 국회불신할 수밖에 없다. 공천권을 배제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오진형 광명; 박근혜 사태 헌법기인 의문든다. 국정운영이 떨어지지만 권위주의 정부고위관료 충성해서 생겼다고 본다. 개헌과 분권 이뤄져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 개헌안 부족하지만, 관행제도문화행정문제에 있다고 본다. 기자화견 각본 짜여있어도, 문제제기 안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권력기구 개편에서 나타남. 헌법과는 무관한 문제들. 문체부. 최순실박근헤관계 등 개헌을 통해서 방지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 보다.

정부형태가 바뀌어야 지방분권이 일어나는 것인가?

청중: 개헌의 적기라고 본다. 남북 평화공존 모색의 시기. 여당과 야당 입장 바뀜 정당민주주의, 전략공천배제. 국회의원의 특권 너무 많다. 국회의원 모든 특권 내려놔야. 국회예산공개해야. 독일의 예를 봐서라도 선거제도가 선행이 되어서 의원내각제 가야 함. 통일문제 해결된 것도 협치와 분권이다. 철처하게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한다. 우리나라 헌법 법 개정에 대해서 대통령, 국회 국민 모두 할 수 있다. 정부 행정기구 자문기구가 있다.

장영수 발제자: 분권 이견이 없다. 분권의 방식의 문제. 각각의 가능성. 미국식으로 가야하는데 전제조건이 안갖춰져있다고 한 것임. 여러 문제들 동의하나. 이 주제 관하여 모든 걸 다룰 수 없다. 사법부 문제의 뿌리는 양승태 대법원장 개인의 문제일까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부터 시작된다. 하 대표 국민개헌특위 참여하셨는데, 헌법자체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누구도 통제못하는 제지못함. 분권형대통령제는 구체적 책임제는? 국민의 낮은 신뢰. 국민설득 안된다. 정치학자 같이 논의하자고 했는데 부과내에서 정치학자 있었는데 같이 논의했었던 결과다.

지성우 교수의 질문. 개헌특위 자문 지방분권 다양한 이야기 나왔는데 문제는 큰 환영을 못받음. 핵심부분이 차라리 연방제라면 말이 되는데 지방자치 유지하면서. 국민여론때문에 연방제 나오면 고려연방제 싫어하니까. 사실 연방제면서 지방분권 문제됨. 하승수 기본적으로 동의함. 한정된 시간안에 모든걸 담아내는 건 이 주제의 성격상 가능하지 않음.

위원회 법적근거는 항상 있다. 없으면 문제된다.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다름. 개헌 헌법 중요성 모르고 있다. 헌법의 중요성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서정옥 답변, 삼권 완전 분립되지 않고 정부여당이 하나다. 국회전체보다 행정이 수십배다(말도 안됨. 국회는 국회의원이 쓰는 예산이고 행정은 국가 전체에 쓰는 예산이다)

가장 덩치가 큰 정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은 다당제다.

비례성 강화 동의한다. 연동형 정치발전 기대. 한가지 전제. 비례명부 정당 수뇌부가 자기맘대로 작성하면 당장 실패할거다. 오픈프라이머리도 다른 정당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하승수: 연동형비례대표제 공천문제갈때. 같이 제안한 내용은 민주적 공천 법제화 중앙선관위 제안. 전략, 밀실공천 금지되어잇음 당원의 비빌투표로어려울 수 있는데 각 정당이 자기정당사오항에 맞게 하고 있다.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 공천에 대한 비례대표 공천은 그렇게 해결하자는 족으로 의견모으고 의석 늘리는거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국회개혁 선거제도개혁 바구려고 하는데 의석확대 어떠냐고 묻는적 없다. 나쁜 여론조사 방법이다. 국회예산 늘리지 않고 유능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동의하냔느 여론조사는 동의할 것이다.

지성우: 오픈프라이머리는 제도적으로 훌륭하나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 있다. 독일처럼 지역주의가 센 데가 없다. 정당명부제를 통해 완하하기 때문. 의원특권 전설처럼 덴마트스웨덴 무료? 우리만큼 급여받고 있다. 8~9명 보좌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 20~30개 한 의원실에서 담당해야 함. 지역 빼고 나면 정채할 수 있는 사람 2~3명도 안됨. 행정부 통제 안됨.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필요하다. 특권 일부 인정하되 너무 그런 부분을 마치 다 없애는게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주장이다. 그 부분으 토론이 필요하다.

박원호: 개헌, 헌법개정 국민투표 통과해야 함. 대통령, 의회, 국민저체 하브이가 되어야 함. 합의 해줘야겠다는 의미 아니뜯어고쳐야지 하는 생각. 한국적 상황에서 적용하면 이렇게 될거다 라는 생각은. 분권형 의회내각해산 분권형 대통령제면 조기총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분권형 하면 복잡한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잇다.

최태욱: 권력구조개편이 먹고사는 문제다. 이 장을 만들어준 국회국가재조포럼 감사하다. 선거제도 개혁 권력구조 개편 관심가져주기 바람.